

# 여야, 통신비·독감백신 한발씩 양보...극적 타결 막전막후

### ‘통신비 vs 독감백신’ 평행선 달리다 우여곡절 타협 與, 통신비 축소해 5600억 확보...野 요구 일부 수용 野, 독감백신 전국민 무료서 ‘취약계층 추가’로 양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절박한 민생 과제를 놓고 여야가 각자 내세웠던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4차 추경 관련 여야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위원장 등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

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전선은 확대됐다.

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편성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에서 한발 물러서 한정된 물량 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접종 대상 및 시기를 구분하는 절충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대상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잡음이 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 단독 표결이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진통 끝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으로 남는다는 위기감을 여야가 공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이날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대

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를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대부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목표 시한 준수를 위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낙연 신임 대표 체제에서 강조해 오던 협치 무산의 부담이 있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경우 ‘민생의 발목을 잡는 야당’ 프레임이 우려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안을 축소해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은 독감 백신 무상접종의 전국민 확대 주장을 거두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합의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정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여기서 확보된 재원 중 1840억원을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령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1900만명 정도인 무료 접종 대상 외에 1100만명의 유료 접종 대상까지 모두 무료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취약계층 105만명만 추가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수용됐다.

현재 초등학교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넓히자는 국민의힘 안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되 지원액은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특별돌봄비 확대는 추경소위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던 사업이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인당 4만원 가량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79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천 ‘다면형제’ 사건과 관련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 47억원도 추가됐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4차 추경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 박지원 “국정원 대공수사인력, 경찰에 강제로 안 넘길 것”

###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유관인력은 경찰로 안 넘겨”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원내 관련 인력은 경찰에 강제로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유관 인력도 경찰로 넘기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은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

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넘기면 인력이 같이 가는지, 인력이 남는건지 충돌이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 반적으로 기능이 넘어가면 사람이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경찰도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넘기는데 인력은

자발적이라는 건 좀 모순된다”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탈북자의 강원도 철원 재입북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박 원장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이며 그 중 다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6명”이라고 보고했다.

박 원장은 재입북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재입북 동기는 다양하다. 회유·협박도 있고 의료위 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북한 내 생활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